

## ‘김영란법’ 설·추석 한시적 예외 검토

정부, 내수 활성화 차원... 농수축산업계 실현 여부 촉각  
농어민 단체 “유예 효과 미미... 근본적으로 제외시켜야”

최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설·추석에 한시적으로 예외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명절 대목이 특수인 농수축산업계가 실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대상에 농수축산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던 만큼 근본적으로 아예 해당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 부처의 건의에 따라 명절 등에 한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회식이나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농수축산물 소비가 격감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선물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농수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일정 기간 선물 5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시 예외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우나 굴비, 전복, 인삼 등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한 농수축산물 소비가 다소나마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최소한 설·추석 연휴 등 대목에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농·수·축산업계는 “유예에 따른 효과는 미비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장흥지역 한우 판매 두수는 930에서 720두로 줄어드는 등 장흥토요시장 한우삼합 전문점의 매출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한시 유예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라면서 “정부가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담양·장성·함평·영광)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일부 농어촌지역 단체장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법의 유예와 적용 범위를 좁히자는 개정안과 건의안을 수차례 제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與 비주류 유승민 비대위원장 추천... “거부 뎀 분당”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승민 의원을 추천하고 당 운영의 전권을 쥐어 달라는 의견을 모아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했던 비박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모임을 하고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당을 고려한 말이나는 질문에는 “그렇다. 개별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집단 탈당을 시사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물론 정 원내대표도 ‘유 의원 전권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어서 조만간 분당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얼굴 드러낸 최순실 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조직원 200명  
역대 최대 보이스피싱 적발 ▶6만  
2016 스포츠 10대 뉴스  
체육계 혼든 최순실 게이트 1위 ▶20만

## 법정에 서니 180도 돌변 최순실 “난 아무 죄 없다”

모든 혐의 부인... 태블릿 PC·녹음파일 등 감정 요구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최씨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씨는 사용자 번호 628번을 단 밝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사용자번호 처리로 공개석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취조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체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

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감탈 시도,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PC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서류 증거는 ‘실물 화상기’에 비해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중범 수첩’에 관해서도 “감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직접 법정에서 내용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최순실, 정부 고위 인사 명단 수정” 특검팀, 인사 개입 구체 정황 포착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정부 고위 관계자 인사에도 농단을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인사 명단을 받고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검찰 수사로 최씨 측에 초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각 장관 등 인사안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손봐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통상의 조언’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 고위 인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향후 정 전 비

서관과 최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보낸 문서파일을 각각 입수했다. 이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이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